우암학원 창학 69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NAMBU UNIVERSITY

光州日報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955호 1판 (음력 2월 2일) 2019년 3월 8일 금요일

광주일보 뉴스
NAVER
공식 포스트에서 보세요

매화마을의 봄 … 꽃길을 걷다 7일 오후 매화가 만개한 광양시 다압면 청매실농원을 찾은 상춘객들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청매실농원에서는 8일부터 17일까지 제21회 광양 매화축제가 열린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시아 문화전당·문화원 통합 '하세월'

'아특법' 만료 1년 앞 … 현 2원 체제론 효율 운영 어려워
문화전당장 차관급 격상·재원은 국가 부담 방안 찾아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내년 4월 만료되는 가운데 향후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 두 기관의 통합 여부가 지역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광주시나 시의회, 시민사회 등의 의견이 통합돼 있지도 않고 이에 대한 중지를 모으는 절차나 움직임도 없는 상태다.

문체부는 두 조직을 통합하기 위한 조직진단 용역을 이달 중 발주한 뒤 이르면 7~8월께 결과에 따라 통합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감독기관인 문화전당과 콘텐츠 창·제작 업무를 위탁받은 아시아문화원이 '2원 체제'로 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그동안 수차례 제기돼 왔다.

당초 아특법에 따르면 '5년 후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전부 위탁 한다'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 부칙은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고 이후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평가 결과와 전부 위탁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논란의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사업을 위탁하는 것인지, 결과가 좋지 않아도 위탁을 한다는 것인지 모호하다. 또한 기대만큼 성과가 좋지 않으면 전부 위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인지 향후 결과를 두고 해석이 분분할 것으로 보인다.

평가위원 구성과 내용은 어떤 식으로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용역 결과와 통합 여부, 통합 방식은 향후 문화전당 운영을 비롯한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당초 문화중심도시사업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청사진을 만들어간다는 복안이었는데, 결과에 따라 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만약 통합을 거쳐 법인화 형태로 운영된다면 아시아문화원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돼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인적 구성이나 여건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통합되더라도 국가기관 형태로 남아야 국가 보조금 등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시는 "문체부와 의견 조율중으로 국가기관이나 법인 어느 쪽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문화전당이든 문화원이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훈 지역문화교류재단이사는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마스터플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민선7기 문화경제부시장제를 도입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컨트롤 및 전략 방안이 선제적으로 강구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청 복원 부분만 해결됐지 다른 분야에 대한 관심은 저조하다"며 "지역 여론을 수렴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전달하는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현재 지역에서는 통합과 아울러 전당장 직위를 차관급으로 격상하자는 여론이 적지 않다. 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은 법인 형태로 운영을 하되 운영자금은 국가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하자는 복안이다. 현재 관련 법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어떻게 법안이 처리 되는가에 따라 통합의 방향, 국가기관으로의 일원화 등 방식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권행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장은 "위원들 논의 과정에서 무게를 두고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가 '국립서울대 법인화'와 같은 방식이다. 재원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은 통합된 법인에서 맡는 것인데 현 단계에서 정해진 것은 아니다"면서 "전당장의 차관급화는 공무원 수가 일정 정도 돼야 하는데 예산 지원 등의 문제로 기재부 등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구조가 아닌가 싶다"고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변호사개업인사

저는 이번에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를 끝으로 9년동안 근무한 정든 검찰을 떠나 고향 광주에서 변호사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풍부한 법률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격려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김은형** 올림

◆ 주요학력 및 경력 ◆
- 광주 전남고, 전남대 정치외교학과(법학과)
- 제49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39기
-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
- 광주지검 해남지청 검사
-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 업무개시 : 2019. 3. 4.
● 개업장소 : 광주 동구 준법로 4, 401호 (지산동, 현대법조타운)
● 대표전화 : 062)225-7558 FAX 062)225-7559
● 개업소연 : 2019. 3. 15(금) 오후 5시 부터

전두환, 이번엔 광주 법정 서나

변호인 통해 광주지검에 자진 출석의사 전달
재판부, 이순자씨와 함께 재판 동석 신청 허가
또 꼼수 부려 불출석 땐 구속영장 발부할 듯

전두환(88) 전 대통령이 오는 11일로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재판에 출석할 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전씨가 변호인을 통해 출석의지를 밝힘에 따라 원활한 재판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에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3·7면〉

하지만, 일각에선 그동안 수차례 핑계를 대며 불출석했던 전씨였던 만큼 이번에도 '또 다른 꼼수로 불참할 것'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듯 구인장을 발부한 법원과 구인장을 집행할 검·경의 의지는 단호하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번에도 불출석하고 구인장 집행마저 거부한다면, 구금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7일 광주지검 등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오는 11일 오후 2시 30분 광주법정 201호에서 열린다. 앞서 광주지법은 지난 1월 7일 재판에 불출석한 전씨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구인영장시효는 재판일시까지다.

전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를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그동안 두차례나 재판기일을 잡았지만, 전씨가 출석하지 않아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 공소사실 확인 등 정식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이번 재판만큼은 반드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전씨측은 지난 5일 재판부에 재판당일 '신뢰관계 있는 자(아내 이순자)'의 동석을 신청했으며, 재판부는 7일 피고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전씨 경호를 맡고 있는 경찰도 지난 6일 광주지법을 찾아 경호 점검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호 등의 문제가 있어 전씨의 변호인에게 자진출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전씨가 반드시 출석하겠다'며 자진 출석의사를 밝힌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다만 출석과 불출석 모두를 염두에 두고 재판이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8일 전씨의 주소지 관할인 서울 서부지검으로 담당 검사와 수사관을 파견해 구인장 집행업무를 맡은 서대문 경찰측과 전씨의 출석을 전제로 대책회의를 한다.

출석의사를 밝힌 전씨는 11일 오전 승용차를 이용해 서울에서 광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구인장 집행에 나서는 경찰은 출석여부와 상관없이 재판일 오전 전씨의 자택을 방문해 자진출석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씨가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게 되지만, 실제 구인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강제구인 대상인 전씨가 건강 등을 이유로 자택 대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집으로 들어갔더라도 방문을 걸어잠근 채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구인절차를 집행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구인영장 집행시 과격한 방식을 동원해 강제로 체포한 전례는 거의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7년 재판에서 증인 출석을 거부하다 구인영장이 발부됐지만 계속 거부해 강제로 데려오지는 못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 5·18 행사위 출범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오늘을 밝히는 오월, 진실로! 평화로!'를 슬로건으로 7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정종제 광주시행정부시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행사위 관계자, 시민 등 200여명이 참석해 올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자고 다짐했다.

행사위는 출범선언문을 통해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전 국민과 함께하는 기념행사를 준비하겠다고 기본 방향을 밝혔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5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9]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